

미주·유럽 ‘알짜 노선’ 추진…서남권 관문으로 뜬다

무안 통합 공항 시대 ‘활짝’ 광주·전남 미래향한 ‘비상’

〈상〉 호남권 유일의 국제공항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이 합의에 이르면서 ‘무안 통합공항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고, 유럽, 미주 노선 취항까지 유지하면 무안공항은 서남권 대표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 통합공항시대’를 열기 위한 광주·전남의 과제와 현안을 짚어본다.

대통령실과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공동 발표문에는 무안공항의 위상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고 서남권 대표 관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6자 협의체는 지방항공청을 호남권에 신설하기로 했고, 2027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에 맞춰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공항에 이전하기로 했다. 또 미주, 유럽과 같은 수요가 높고 이용객 수가 많은 ‘알짜’ 노선도 무안공항에서 뜨고 내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27년께 무안 통합공항 시대가 사실상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따른 안전강화 개선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고로 무너진 외곽담장 보수는 마무리했으며, 종단안전구역(240m) 확보는 국토교통부의 고시만 남은 상태다. 조류탐지레이더, 열화상카메라와 음파 발생기 등 첨단장비 확충, 복측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등도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안공항은 유럽과 미국을 오가는 500좌석 이상의 대형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 2800m였던 활주로를 국제공항에 걸맞게 3160m까지 늘리는 작업이다.

지난 2019년 시작한 공사는 총 사업비 469억원을 투입, 활주로 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조명과 같은 부대공사를 남겨둔 상태다. 2022년부터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해 여객청사 리모델링, 주차장 증설, 장비고 신축 등을 끝내고 재개항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활주로를 연장되고, 2027년 호남고속철이 무안공항에 정차하게 된 데다, 정부가 서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면서 새 국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합의
항공안전 강화 개선 마무리 수순
새만금 공항 사업 ‘백지화’ 움직임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에 KTX 개통
2027년엔 새로운 전기 마련될 듯

을 맞게됐다.

과거 무안국제공항은 폐쇄 직전, 정기노선으로 6개국 9개 노선 밖에 없었다. 항공수요가 없고 장거리 노선을 유지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자도 심각해지면서 불필요한 공항이라며 못매를 맞은 적도 있다. 국내 8개 국제공항 가운데 인천, 제주, 김포를 제외한 나머지 5개(양양, 청주, 대구, 김해, 무안) 지방 국제공항 가운데 무안공항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누적 적자만 1248억원으로 이들 공항 중 가장 많았다.

무안공항 이용객 수 역시 2020년 11만3000명→2021년 2만1000여명→2022년 4만6000여명→2023년 24만6000여명→2024년 40만6000여명으로, 정부가 지난 2020년 내놓은 ‘제6차 공항개발 중합계획(2021~2025년)’에 따른 2025년 무안공항 이용객 수 전망(372만명)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물론 코로나19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악재가 겹쳤지만, 자생하기에 어려운 구조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를 통한 범정부의 전폭 지원이 확인되면서 과거와 다른 혁신이 예상된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무안공항과의 중복 논란이 있었던 해당 공항의 백지화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공항 계획을 취소하게 되면 무엇보다 무안공항만이 호남권 유일의 국제공항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 17일 6자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단순히 군 시설 이전을 넘어서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 국제공항으로 도약시키고 주변의 삶의 질을 높이며, 도시 재생과 발전의 새전기를 맞는 중대한 국가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다만 무안 통합공항시대 개막의 선제 조건인 무안공항 재개항을 위해, 수사당국과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당장 경찰은 참사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압수색에 나섰고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별다른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와 공청회 내용이 동반돼야만, 무안 통합공항시대 개막의 선제조건인 무안공항 재개항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재개항이 된다면 조정 역할을 집중해 무안공항의 서남권 관문 공항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실리콘밸리’로 조성될 광주공항 부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가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확정된 가운데 공항 이전으로 남겨질 광주공항 부지 개발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820만여㎡(248만여평)에 달하는 광주공항 부지를 ‘제2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18일 항공에서 촬영한 광주공항.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2심부터 적용

무작위 배당 후 집중 심리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적인 쇄신안을 내놓으며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규 제정은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재판의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특히 관련 사건의 1심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의 요청과 법원행정처의 검토가 맞물려 신속하게 추진됐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무작위 전산 배당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몰아준다는 ‘배당 조작’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신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즉시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관련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 배당도 중지된다. 재판부가 오직 내란 사건 심리에만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집중 심리’ 체제로 즉각 전환하는 것이다. 법원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예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중전의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의 임의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내란 가담…경찰 총수 첫 사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투입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경찰 총수가 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

장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피청구인(조지호)을 파면한다”고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인용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조 청장의 핵심 탄핵 사유로 ‘국회 봉쇄’와 ‘선거위 경찰 배치’를 꼽았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을 통해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될 것임을 인지했음에도 국회 출입문을 봉쇄했다”며 “이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 중대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특히 조 청장이 계엄 당시 포고령에 따라 국회 의원들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지시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점을 무겁게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 역시 헌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조 청장 측은 심판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박에 없었으며, 우발 상황에 대비한 경력 배치였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온라인 계약금 결제

6년 / 150,000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Trade-in 프로그램

차량 매입 프로그램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1년 / 20,000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